

Extending Opportunities: How Active Social Policy Can Benefit Us All

Summary in Korean

기회 확대: 국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회정책 수립

국어 개요

경제성장과 사회보장제도는 OECD 국
사회여건에 눈부신 향상을 일으켰으나...

지난 몇 십년동안 수억 명의 OECD 국민 삶은 현격한 향상을 보게 되었다. 현대인들은 더 오랫동안, 보다 건강하게, 더 번영된 삶을 영위하게 된 것이다. 1990년대 경제회복으로 수백만 명이 근로세계에 진입 혹은 재진입하면서 실업과 사회수당 급여는 대폭 감소하였다. 한편 국가는 창의적 정책 방안을 도입하여 어린이와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며 국민 개개의 인생 출발이 가급적 최상여건에서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있다.

... 하지만 사회문제 전부를 해소시키지
못했다.

이러한 향상의 다수가 OECD 국가에 걸친 경제성장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삶의 질 향상에는 명백한 핵심 요소로 작용하나 제반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그래도 역부적이었다. 즉 경제 부흥이 확장되어 가는 중에도 각 OECD 인구전체의 상당 비율이 유년기에는 불이익한 여건, 청년기에는 근로에서의 소외, 노후에는 고립과 자급자족 수준 저하 등에 처하게 될 위험성을 여전히 안고 있다. 요컨대 기존 일반사회정책이 국민의 이같은 어려움을 적절히 극복시키는 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모든 OECD 국가에서 70년대 중반과 90년대 중반 사이 노동 및 자본소득의 계층간 분포는 더 불균등한 양상을 띠우게 되었다.

그림 1. 동치시킨 가계소득의 분포 동향, OECD 평균



소득의 불균등과 빈곤에 관한 OECD 데이터베이스는 시장 소득(i.e. 근로와 자본에 의한 소득)과 가처분 소득(i.e. 세금 및 정부사회급여를 제한 총소득)의 분포 격차를 따로따로 분석하는 데에 유용하다. 7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중반까지 지난 20년동안 시장소득 격차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고 이 증가의 일부만이 세금과 정부사회급여에 의해 상쇄될 수 있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 시장소득 격차의 확장은 전반적으로 정지된 상태이다. 이 격차 정도는 17개 OECD 국을 대상으로 각각 80년대 중반, 90년대 중반, 2000년대 중반에 Gini 계수로 측정되는데 이 때 70년대 중반 수준을 지표 100으로 삼는다. 70년대 중반에서 80년대 중반 사이 격차 변천은 OECD 7개국만의 수준을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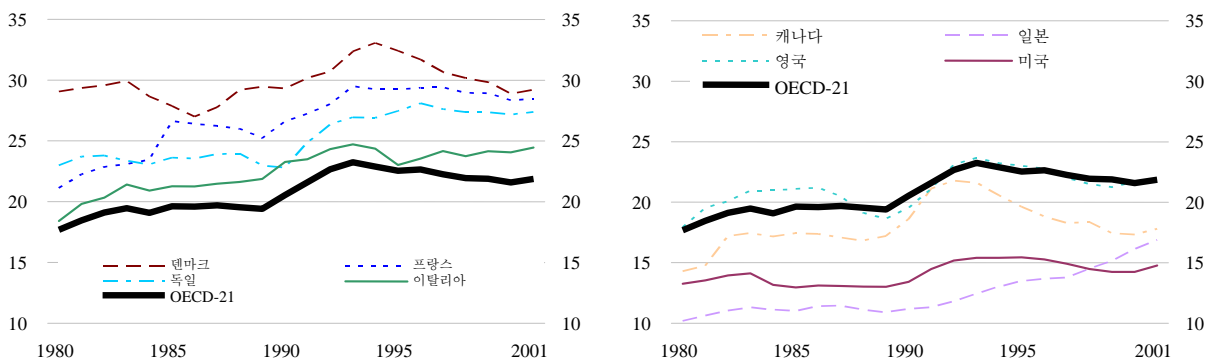
시장소득 격차의 확장 원인을 해소치 못하면 향후 경제성장은 타격을 받을 것이며...

시장소득 불균등은 OECD 국가 전체에 최근에까지 확대되어 왔기에 정책결정자의 또다른 우려대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왜냐면 제일 먼저, 경제성장, 기업보상 따위 여타 공공목표에 비할 때, 시장소득 불균등은 그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국민의 공통 관심대상일뿐 아니라 시장경제 분포 동향에 일체 무관심한 이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빈곤상태의 인구가 상존한다는 사실은 이들이 총노동력이나 사회 활동 참가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빈곤과 불균등은 비효율적 사회의 산물로서 인적 자원, 고용 기회 및 인생 변화가능성의 활용에 저해를 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빈곤가정 아동은 인생성공 가능성에서 부유가정 아동에 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의 격차 심화는 취업 기회의 불균등마저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이 제반요소를 감안할 때, 수백만의 가구와 이들 자녀가 겪고 있는 현 빈곤문제를 해소치 못한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점일뿐 아니라 또한 수년 후 경제성장지속 역량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 게다가 공공지출 확대는 해결책이 못 되고...

시장소득 격차 확장은 가지각색의 원인에 기인한다. 본 보고서는 이 격차 확장의 원인보다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이 때, 악화된 시장소득 격차를 이해하는 접근방법의 하나로 과거 사회정책 수립과정의 재검토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로, 경제성장의 득을 가장 많이 본 이를 과세하여 높은 급료에 취직 불가능한 집단을 보상. 하나 이러한 접근방법이 갖는 본질적 문제도 있어 시장소득 격차가 계속 심화된다는 전제하 언젠가는 보다 많은 현금을 재분배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조세부담 증가는 부유층 유권자의 반발을 사게 되고 한편 세율의 추가 확대는 투자와 근로의욕의 저하를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 근로자들은 고령층 부양료 증가로 이미 상당한 재정 부담을 받는 입장이므로 공공출자 사회적 지출의 추가 확대를 강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림 2. OECD 국 총 공공 출자 사회적 지출, GDP 대비 %, 1980-2001



OECD 사회비용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췌한 이 데이터는 사회목적의 공공지출 확장을 시사한다. OECD 21 개국의 총 (즉 수입 이전) 공공출자 사회적 지출은 1960-1980 년 사이 20 년간 두 배로 늘어났고 이 후, 비록 증가율이 감소되었으나 상승 추세를 고수하여 1993년에는 평균 GDP의 23% 수준의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 이후, GDP에서 평균 1.5 여점이 감소된 수준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전적으로 의료 외 여타 사회적 지출에 의한 것이다.

더욱 야심찬 사회정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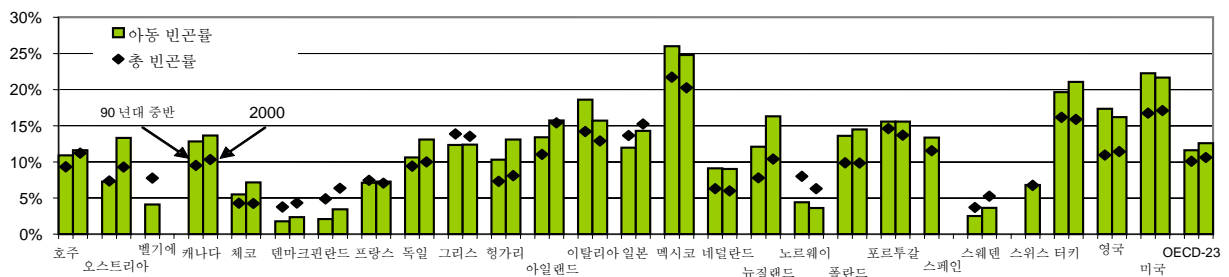
현재 당면한 사회적 도전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OECD 국은 세계나 공공 이전을 겨누는 방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여타 방안을 확립토록 해야 한다. 적극적인 사회정책은 부정적 환경 여건으로 말미암은 국민의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덜어주는 것으로 만족치 않고 국민의 개인 발전을 결정짓는 환경 여건 자체를 직접 변화시키는 데에 그 역점을 둔다. 요컨대 과거의 반응적, 보상적 접근방법에서 탈피하여 인력 투자에 주력하면서 이들이 자급자족 능력을 갖춘 자율적인 사회 일원으로써의 역량을 극대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는 사회정책이 개인 일생의 인생 전망을 기초로 하여 설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무려, 개인

인생에서 한 시기의 생활여건이 차후 생활여건에 불가피하게 미치게 될 영향 정도를 파악하여 향후 당면 가능한 문제를 예측,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적극적 사회정책상의 우선순위는 각 아동이 가급적 최상의 여건에서 인생을 출발토록 하는 것이며...

1. 사회문제의 다수가 유아기에 기인한다. 쉽게 상상이 가듯, 아동의 빈곤 퇴치가 사회정책에서 핵심 선결과제이다: 불이익 가정에서 성장한 아동은 학교성적이 부진하여 성인이 되서는 일자리 마련에 투사해야 하며 따라서 실업, 질병, 불구 상태에 처할 위험성 또한 보다 높으므로 불이익과 결핍의 인생이 세대간에 계속 순환되어 진다. 보다 대체적으로, 가정의 불안정은 부적절한 치료와 비슷하여 인생 변화 가능성에 저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세제, 소득이전체제, 아동 보육 지원 등을 적절히 혼합한 각종 개혁을 통해 일하는 부모가 직업과 가정의 책임을 양립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긴요한 시점이다.

그림 3. 저소득층 아동비율



지난 20년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저소득(중위 동치소득 수준의 50%로 추정)의 위험성은 아동층과 아동이 딸린 가구에 치중되어 왔다. 2002년에 OECD 회원국 아동의 평균 12% 이상이 빈곤 초입 수준의 50% 이하로 소득 수준이 전락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여기에 속하는 아동이 20%를 상회한다. 총 빈곤층 비중이 높은 국가가 아동빈곤층 비중도 더 높은 경향이 있다. 한편 총 빈곤층에서 아동 비중은 국가마다 현격한 차이가 지는데 이는 일부 국가의 특정 요소로 말미암아 아동이 불이익 상황에 처하게 될 위험성 또한 악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소득 격차와 빈곤에 관한 OECD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췌한 이 데이터는 90년대 중반과 2000년 사이의 여러 해를 참조한다.

... 부모들이 직업과 가정 생활을 보다 수월히 양립시키도록 하는 것이며...

이 목표를 이루게 되면 대부분의 OECD 국에서 인구 대체율 수준도 못 되는 출산을 또한 촉진받을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인구 대체율 수준에 못 미치는 출산율 수준은 사회 전체에 대폭의 사회비용과 경제비용의 부담을 가중시켜 연금 급여에서 각 근로자의 부담 증대, 투자 위축, 확대 가족이 가족

일원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 저하를 차례로 야기시킨다. 그럼에도 정부는 산아장려정책이 반영해 온 명백한 역사적, 문화적 이유때문인지 이 정책의 공인적 추진에는 내내 주춤하는 태세이다. 그렇지만 여성 스스로가 현재 자녀 수 보다 많은 자녀를 희망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국가는 이들의 희망을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도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이 영역의 정책 우선순위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다:

- 유아의 개입 프로그램을 비롯한 아동교육에 투자, 특히 가족의 밀접한 개입을 장려하는 프로그램 도입
- 가구의 두번째 소득자의 근로 의욕 저하를 막도록 세제 구조와 사회급여체제를 조정하여 주부 고용 활성화
- 보육 시설, 육아휴직, 가족 친화적 근로처 분위기 조성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적절한 조정을 통해 가정 책임과 직업 책임의 양립 도모
- 육아비용의 보다 포괄적인 사회화와 젊은 부부의 노동시장내 안정된 자리 확보를 위한 장려책 도입으로 출산율 촉진에 유리한 여건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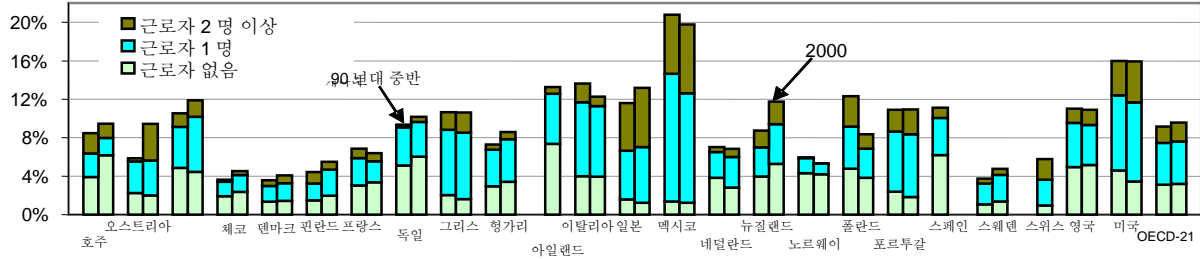
... 사회 초년생이 질적 직업 구색에 부딪치는 장벽을 극복토록 근로목적의 후생 welfare-to-work 정책...

2. 무직자는 노동 인력에 편입되고 취약계층은 보다 높은 급여직을 얻게 되도록 이들의 근로기능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경제진보와 사회진보의 양립에 이르는 최상의 길이다. 무려 실직, 자신감 상실, 근로기능 저하, 고립 상태, 이어 소외로 연결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수의 OECD 국가가 사회급여를 대폭 경감시키고 실업자를 노동 인력에 통합시키는 데에 성공한 현재 시점에 이와 같은 노력의 범위를 모자 혹은 부자 가정과 장애인에까지 확장시켜 이들에 맞춘 적절한 개입으로 노동시장에의 통합을 강구하는 데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근로목적의 후생 정책은 비록 긍정적 결과를 도출케는 하지만 결함도 있어 여타 정책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근로간 후생 welfare-in-work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며...

만일 사회급여 수령자가 직업 구색뿐 아니라 생계 유지와 빈곤 방지에도 힘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간 후생 정책이 절대 뒷받침되어야 한다. 보다 많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적정의 생활 수준을 보장받도록 더 효과적인 사회 원조가 필요해진다. 나아가 시장경제내 유급 근로를 보완할 대안 근로 형식 또한 마련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는 사회 생활 참여를 도모함은 물론 후생 급여에 생계가 달렸던 가정의 자녀들이 향후 의존 문화로 인해 활동에 제약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그림 4. 가장이 근로연령인 가구 대비 저소득층 비중, 2000 년쯤, 성인 근로자 수로 측정



성인이 한 명도 취업이 안 된 가구 경우 한 명이라도 취업자가 있는 가구에 비해 저소득층(i.e. 상대적 빈곤)층에 속할 위험성이 훨씬 높다. 한편 모든 OECD 국가에서, 근로자가 1명 이상인 가구가 저소득층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게다가 2명 이상의 근로자 가구조차 부적절한 소득의 위험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가장이 근로연령인 가구 인원을 대상으로 측정된 빈곤 인구(중위 소득 초입의 50%를 기준)의 비중은 각국마다 막대기 높이로 표시된다.

이 영역의 정책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다:

- 모자 혹은 부자 가정과 대부분의 국가에 상존하는 장애 인구를 특별히 고려하여 근로목적 후생 정책의 아젠다 보완.
- ‘근로의 유급화’, 일자리 유지, 저급료 근로자의 직업 전망 확대 등에 기초한 정책 활용으로 근로간 후생 제고
- 현행 프로그램 경우, 필요한 인구 모두에게 활용되도록 적용 대상자 범위를 확장시켜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 제공된 사회급여의 적정성 보장, 유일한 사회정책 주체로서의 ‘근로’ 인식 탈피 등 이들 사항을 강구하여 시장경제내 유급 근로가 불가능한 집단 대상의 사회 프로그램의 실효성 강화
- 빈곤 및 소외 퇴치를 겨는 각종 정책간에 일관성을 도모하며 빈곤 해소가 실현되도록 장기 안목에서의 수행과제 책정

... 이어서 공공연금개혁이 한창인 현재,
고령인구의 경제·사회 생활 참가를
장려토록 조취를 취하는 것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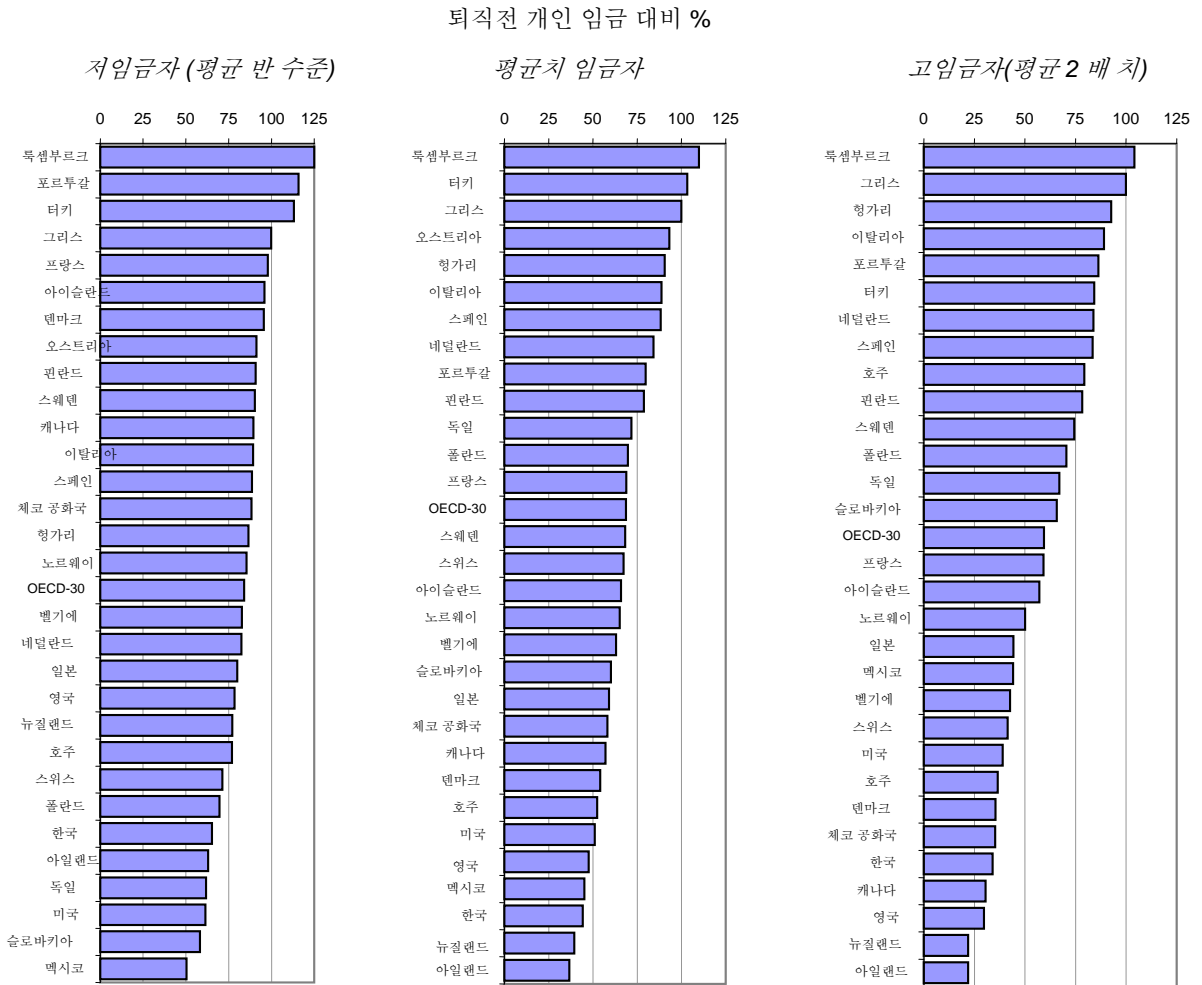
3. 개인 능력만큼 지불하는 pay-as-you-go 식의 연금제도는 고령인구의 복지 증진에는 결정적 역할로 기여해 왔으나 잇따른 비용 증가를 수반하면서 역으로 젊은층 대상의 사회적 투자규모를 축소시키고 연금 급여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하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노년인구의 연금규모 축소가 이를 해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아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퇴직 계획 설정시 토대로 했을 연금 서약을 정부가 깬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에 대한 불신을 낳고 또한 노년층의 생활수준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년층 빈곤 문제는 여태까지 완전히 해결을 못 본 상태이다. 이전의 정부측 연금 서약을 지속 가능한 탄탄대로에 올리기 위해 현 연금제도는 한쪽의 사회급여와 또

한쪽의 평균수명 증가와 근로연령층 소득간의 연관성을 좀 더 현실적으로 고려,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차후 잇따른 세대들이 일생에서 상대적으로 점차 감소된 기간을 근로에 소요하게 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추세가 못 되거니와 이는 다수의 노년 인구가 희망하는 사항도 아니다.

*... 또한 비용이 적당하며 질 높은 장기
요양 서비스를 원하는 노년층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보다 많은 노년 인구가 계속 노동 인력에 머물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 현재 여건이 퇴직 연령의 포괄적 연장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노인층의 질환자와 장애인 비중이 시사하듯, 일부 노년 인구는 연령 외 여타 장애 요소에도 제약을 받는 실정이므로 이 요소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 역시 시급하다. 실로 비용이 적당하고 질 높은 장기 요양 서비스가 필요할 노년 인구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국가는 공식과 비공식의 요양 서비스 양대를 적절히 조화한 정책을 도입하여 질환 노년층은 개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요양 서비스를 받고, 여성은 대개 담당하게 되는 노인 수발 책임을 지나치게 지거나 근로자로서의 위치를 포기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5. 상이한 임금수준의 근로자 대상으로 OECD 연금제도의 순 소득대체율



근간 OECD 보고서 *한눈에 연금 - OECD 국의 공공정책*에서 발췌한 위 그림은 퇴직전 임금 대비 수급 연금 수준의 비율을 나타내며 이는 오늘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남성 근로자가 향후 근로기간의 완료와 함께 공공 기관과 민간 위탁 연금제도에서 수급을 기대할 수 있는 연금 수준의 비율을 반영한다. 이 비율은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평균치 임금자는 순 소득대체율이 70%(즉 세입후, 연금 소득은 개인 연금 순입금액의 약 30%가 줄어든 수준에 평생 머문다)도 못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고임금자(평균 수준의 2 배 치)는 60% 미만의 연금을 수급할 것이다. 조사 대상 국가는 순 소득대체율의 감소순으로 나열하였다.

이 영역의 정책 우선순위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 소득 중위계층과 상위계층의 퇴직자를 위한 퇴직연금의 다양화 도모, 저소득 퇴직자 중 공공 연금 대상자의 선정기준 개선 등을 통해 정부 예산에서 노년층 연금에 소요된 비용 비중 억제
- 조기 퇴직으로의 통로를 막기 위해 각종 조치를 혼합하여 근로기간 연장에 유리한 여건을 구축, 나아가 공공 연금 자격의 기준 연령 연장, 연금제도 및 여타 사회보장제도상 허용된 조기 퇴직의 지원 조치를 수정, 노년 근로자의 취업과 유지에 유리한 장려책으로 고용주 지원

- 비공식 요양 서비스 제공자 지원, 노년 질환자가 공식 요양의 재가 서비스를 받도록 방안 마련, 각종 대안 요양시설에 대한 환자 선택권 확대 그리고 요양 서비스 품질의 평가 제고 등 이에 연관된 정책을 활용하여 장기 요양 서비스의 품질과 접근성 제고

적극적 사회정책은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더 잘 양립시킨다는 약속은 지키지만...

이와 같은 사회정책 아젠다 실시에 성공하면 고용의 수준과 품질 향상, 소득이전 급여에 대한 의존성 감소, 시장소득 분포 격차의 축소 등의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전망은 후생국가에 관한 공공토론에서 오랫동안 난제로 제기되었던 경제성장에 대한 사회보장의 악영향을 적극적 사회정책의 도입으로써 극복해 갈 수 있다는 기대 또한 가능케 한다. 이 아젠다의 시행은 ‘공공 목표’의 보다 견실한 달성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과 소외 퇴치, 국민 개개의 인생목표 실현, 그리고 앞으로 노후에 보다 안정된 삶의 영위를 실현시키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 하지만 좀 더 일관성 있고 보다 장기적 안목의 정책 활동이 요구되며...

이 아젠다가 공공정책에 던지는 도전요인 또한 만만치 않다. 실로 사회정책 영역의 바로 바깥쪽에 위치한 활동을 반영한 사회문제가 상당히 있다. 서로 상이한 사회문제들간에, 경제과정과 사회과정간에 결속된 연계는 복합적 성격을 띠므로 이내 ‘문제 1 건/정치 도구 1 건’식의 전형적 접근방법에서 탈피하여 각종 분야의 정책으로 발생된 사회적 결과를 명시적으로 평가하는 식의 접근방법을 강구하고 아울러 경쟁하는 정책목표간의 상충효과를 확인하며 이어 이러한 상충효과가 시간 경과와 함께 완화되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적극적 사회정책의 투자는 적잖은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게다가 이와 같은 투자는 종종 먼 미래에나 수익을 내게 되므로 오늘 어린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썸에나 수익성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현 사회정책 개혁은 이중 부담에 봉착해 있다 : 과거 실패의 부작용으로 인한 부담과 차후 이러한 실패의 재발생이 없도록 투자해야 하는 부담 이 두 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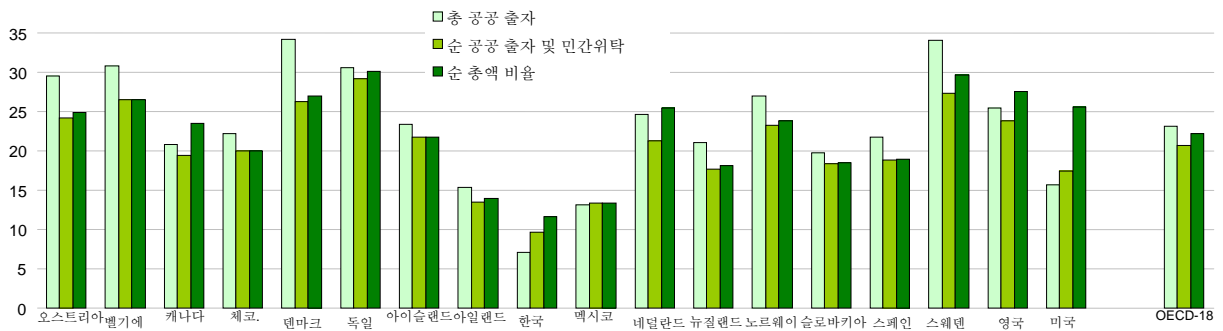
... 또한 창의적 정책의 집행 능력 제고와 비정부 주체의 자원 확보가 요구된다.

이미 공공지출 압력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된 OECD 국은 따라서 공공 프로그램 범위 외의 여타 방안을 활용하여 사회 목표 달성에 대응하려는 중이다. 게다가 민간재정의 연금 역할이 증대되고 비공식 요양 서비스가 대부분의 장기 치료를 주도하는 현 추세를 감안할 때 정부주체 활동을 정부 외 주체 활동으로 보완해야 하는 것이 시급해진다. 그럼 이 시점에서 더 이상의 사회 향상 확보를 위한 도약 발판은 무엇이 될까? 뛰어난 생산성과 늘어난 인원의 노동력은 고용자에게 그만큼 득이 되기 때문에 고용자들은 부모 위치의 근로자가 일과 양육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고 노년 근로자나 허약한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취직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도록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수혜자 역시 본인을 위해 사회전체가 지불하여 제공해 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강건히 다져야 할 것이다. 한편 공공 기관에는 역부족인 자원과 열광을 대폭 끌어내는 데에 수시로 성공을 거두어 들인 비정부 기관은 이렇듯 새로운 핵심 주체로써 민간차원의 사회보장 재정 및 제공을 보다 효율적, 융통적 성격의 사회보장제도로 전환시키는 데 한몫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의 재정 및 제공을 정부 외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적용 대상의 범위나 공정성에 잇따라 난제를 제기하게 되며 또한 기대된 효율성 증진과 비용 경감을 항상 예상대로 이루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보장의 직접 제공자로서의 위치에서 탈피하여 보다 복합적 성격의 신 관리체제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림 6. 공공출자, 민간출자 사회적 지출, 2001

생산요소 비용상 GDP 대비 %



모든 OECD 국가 경우, 직접 공공 지출은 사회적 지출의 주요 출처이나 유일한 출처는 아니다. 제일 먼저, 총 공공 지출 규모는 수시로 사회목적의 세제 혜택으로 보완되고 직접세, 간접세 양대 또한 고객의 지갑에서 끌어내져 정부 제공의 사회급여용 현금의 일부로써 환수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사회적 지출은 공공 부문보다는 개인 및 기업에 의해 조성될 수도 있는데 이는 정부가 이 방향의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거나 아니면 세입 지출이나 여타 보조금을 활용하여 자발적인 지출 조성을 도모한 경우이다. OECD 사회적 비용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한 그림 6 을 보면, 일부 국가는 민간 지출 조성을 장려하여 사회목적 실현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어 왔음을 알 수 있다.

© OECD 2005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OECD 저작권 및 원본 출판물의 표제를 언급할 경우
본 개요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국어 개요는 영어와 불어로 각각 발간되었던 OECD 원본 출판물의
발췌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OECD 출판물과 개요는 OECD Online Bookshop
www.oecd.org/bookshop/ 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ights@oecd.org

Fax: +33 (0)1 45 24 13 91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